

「의약품 무기화 멀지 않다」

정부, 국산녹용 위한 다각적 지원 필요... 업계, 가격경쟁력 품질향상 등 노력해야

주재승/한국의약신문 취재부장

새 천년을 맞아 세계 각국은 다양한 행사로 온통 떠들썩하게 지냈다. 새 천년은 인류에 부푼 희망과 함께,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다소 두려움과 같이 다가왔다.

우리 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Y2K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축제 분위기만은 감출수 없었다. 21세기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부문에서 엄청난 변화가 광범위하게 벌어져, 대변혁의 시대로 예고되고 있다. 국제간의 교역자유화가 급속히 이뤄져 정보, 문화의 실질적 교류가 가능해지면서 지구촌은 말 그대로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풍요로운 「삶의 질」을 전제로 한 다양한 생활양식의 향상은 개인존중과 인간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고, 보건·의료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불치·난치성 질환이 상당부분 정복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수명이 크게 늘어나면서 인류는 「고령화 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1세기가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 시대임에도 분명한 것은 국가간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사실이다.

19세기가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시대로 열강들의 힘 겨루기가 성행하던 시기였다면, 21세기는 냉전의 해소에 이은 「경제」가 지배하는 시대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더욱이 경제전쟁은 지금까지의 국가간 다툼과는 달리 한 나라를 총 한방 쏘지 않고도 속국화하는 이른바 「신 식민지」를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국가의 경제를 보다 튼튼히 할 필요

가 있으며, 이를 위해선 그 나라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량의 자급 자족이 될 것이다. 지구촌의 인구는 50년대를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 이제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인구 폭증에 따른 식량과 물 부족을 걱정하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 일부 국가는 이미 심각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은 우리의 동포인 북한주민에게도 몇 년 전부터 현실로 다가와 많은 북한주민이 중국 등 제3국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사태를 부르고 있다.

식량 사태는 이처럼 한 국가의 체제를 통째로 뒤흔드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무서운 현실이 되고 있다.

□ 의약품의 무기화 경계해야

세계 경제의 블록이 무너지면서 지구촌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이게 됐다. 개인의 경쟁력이 이제는 곧 나라의 경쟁력을 의미하는 시대가 도래된 것이다. 특히 WTO의 출범은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나라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 않는다. 모든 나라가 공정한 룰에 의해서 경쟁을 하게되는 냉정함, 그 자체이다.

세계 각국이 다양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면서도 식량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 역시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WTO가 각국의 농업지원금을 감시하는 것도 단순히 몇몇 나라의 농산물 수출을 돕는다는 차원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문제는 보다 큰 쪽에 있다고 봐야한다.

WTO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식량의 자급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들은 식량사정이 대체로 양호한 지금시점에서 식량수출로 외화를 챙기겠지만 만약 세계적으로 식량부족이 심각해진다면 지금처럼 「이웃나라」 운운하며 의리를 지켜 싼값에 식량을 공급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것이 냉정한 국제간의 관계다. 때문에 각국이 자국의 「중자산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2000년을 맞아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돌입했다고 미래의 발전상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순간 우리는 이미 「식량의 무기화시대」로 들어간 것이다.

의약품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 나라는 선진 외국에서 이미 개발해 한창 사용하고 난 제품을 로얄티 등을 지불하고 똑같이 만들어 사용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약재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 나라고유의 「의·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한의학에서 침·구·부항과 함께 전통적으로 가장 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한약재 분야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고작 2%(1998년기준 전세계 한약제제 시장규모: 491억불)에 불과하다. 한의학의 종주국으로 자부하는 나라치고는 웃지도 못할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국내 한약재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약재 규격화 정책」이 표류하면서 기형적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정책은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한 한약재를 유통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의지로 시행되고 있으나 관련단체들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한약재 시장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한약재가 유통된다고 하기보다는 이해단체들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실정이다.

특히 관련업계는 「신도불이」를 내세우는 농민단체의 주장에 일견 동의하면서도 실상은 이중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국산한약재에 대해선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

고 있으나, 국산녹용에 대해서는 평가 절하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국산녹용이 가격경쟁력과 미건조 유통 등으로 인해 상품가치가 다소 떨어진다는 점은 인정되는 내용이지만 효능이 수입품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관련업계 일각의 주장은 어떤 객관적인 근거도 갖지 못하고 있다.

□양록업계 지구책 시급

우리 나라의 양록이 지난 70년대에 본격화됐다고 볼 때 벌써 3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양록농가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매년 생산되는 녹용의 대다수는 생녹용으로 진지 등을 통해 판매되다보니 계획적인 녹용 생산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생녹용 위주의 국산녹용 판매방식은 대량 유통을 어렵게 하는가 하면 보관과 사용의 불편을 초래,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소량 생산 및 판매는 유통가격을 높여 국산녹용의 이미지를 「비싼 녹용」으로 만들고 말았다.

따라서 국내 양록농가에서 생산되는 녹용을 한의약계가 이용토록 하려면 우선 사용의 편리성을 고려, 건조녹용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중간유통단계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판장」 등의 조합을 결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렇게 되면 양록농가는 우수한 녹용을 생산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고 공동조합이 녹용의 건조(한약재화), 판매 등 유통을 전담함으로써 생산과 유통의 이원화를 이뤄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협회는 국산녹용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품질향상 방안을 개발, 추진하면 국산녹용의 한약재시장 진입은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다만 한약재 가운데서도 중요하고 다양하게 사용되는 녹용의 속국화를 막기 위해 정부의 차원의 정책 및 양록농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